

불평등에 대한 재평가

윤기중

본 연구는 오랫동안 이용·적용해 오던 소득분배에 대한 가치기준, 소득분포의 불평등도의 변동이론, 불평등의 척도 그리고 한국의 불평등에 대하여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과거 공리주의의 가치에서 로울즈의 정의론으로, 불평등의 변동에 대한 쿠즈넛츠 이론에서 경제학적 원인 분석에 대한 재검토, 불평등도에 대한 기술적 척도에서 규범적 척도로 그리고 한국의 불평등 변동 양상과 계측에 관한 자료를 분석·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I. 서론

개인소득분포의 불평등에 관해서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내용은 ①분배의 공정성, ②불평등도의 변화문제, ③불평등도의 측정 문제, ④한국의 불평등도 문제 등이다. 분배의 공정성 기준은 한계생산력설, 기회균등설, 필요와 기여의 정도에 의한 분배, 공리주의 사상에 의한 평등분배설 그리고 정의론에 입각한 분배론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공리주의 사상과 정의론에 입각한 격차원리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불평등도의 변화추이는 성장과 관련시켜 주로 논의되어 왔고, 여기에는 성장과 불평등 간에는 상쇄된다는 설 그리고 불평등도 변동의 역 U자형가설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역 U자형가설에 관해서, 그리고 그 이후 이 가설에 대립되는 이론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불평등도의 척도는 기술적 척도와 규범적 척도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척도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 척도와 규범척도로서 평등분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120-749.

본 논문은 1999년 12월 8일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주최 제2회 효정 이순탁 교수 기념 강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배등가소득(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income)설인 에티킨슨 척도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한국의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추정·평가되어 왔으나 여기서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통합된 자료에 의한 불평등도를 들고 대비, 그 방법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상의 문제 논의는 오랜 역사가 있으므로 과거에 전통적으로 생각해 오던 가치와 방법을 검토·재평가하여 현대적 가치와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하려는 것이 본 연구가 추구하는 바다.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가치와 불평등도와 성장과의 관계, 한국의 불평등도 문제, 그리고 불평등도의 추정 문제는 기존의 문헌조사를 통해서 여러 논의와 연구 결과를 종합·검토하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증분석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헌조사와 검토 그리고 평가는 불평등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분배의 공정

경제적 자원이나 경제활동 성과의 분배방법은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의 기본 과제이었다. 이러한 기본 과제는 정치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전제한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분배의 공정성에 대하여 논의될 뿐이다. 이러한 분배의 공정성은 바로 평등으로 해석된다. 평등의 윤리적 분석 대상은 두 가지인데 ①왜 평등해야 하는가(why equality?), ②무엇이 평등인가(equality of what?)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 같으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마치 하나의 문제인 것같이 보인다. 가령, 소득 재산, 기회, 성, 자유, 그리고 권리 등에 관한 평등을 논의할 때 그 주제를 알지 못한 채 평등을 옹호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평등의 주체도 다르다. 로울즈(John Rawls)는 '자유와 평등과 기본재 분배의 평등'을 주장했으며, 도우킨(Ronald Dworkin)은 '평등한 취급 그리고 자원의 평등'을, 네갈(Thomas Nagel)은 '경제적 평등'을, 그리고 스컬론(Thomas Scanlon)은 '평등'을 각각 주장했다.¹⁾ 평등이 주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로울즈 외에는 모두 공리주의자이기에 별 논쟁은 없었고 다만 공리주의와 로울즈의 정의론에만 주목하게 된다. 공리주의는 총효용의 최대화만을 추구하고 있으나 사실은 효용증감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숨겨진 효용의 평등주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로울즈의 정의론은 불우한 입장에 있는 사람

1) Sen [31], pp. 12~13.

에게 최대의 이익을 준다는 격차원리에 주목하게 된다.

1. 공리주의

그 동안 논의되어 온 분배의 공정은 공리주의와 로울즈의 정의론 외에 여러 방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들 논의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한계생산력설을 들 수 있다. 생산요소의 결합 방법은 한계생산력이 균등하도록 결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때 한계생산력 또는 한계생산물은 완전경쟁하에서 요소가격과 같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생산에 참여한 노동력의 경우 그 임금은 그의 한계생산물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생산요소에 대한 분배는 그의 한계생산력과 같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주장한 사람으로 Friedman [14]과 Hayek [17]를 들 수 있다. 둘째는 기회균등설이다. 분배의 공정은 절차의 공정과 분배 결과에 대한 공정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Okun [26]은 전자의 절차상의 공정을 중시하고 있다. 즉, 임금의 경우, 학력간에 임금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교육기회의 균등을 주장하게 된다. 교육기회의 균등은 기회균등설의 한 예라 할 수 있다.²⁾ 셋째는 필요와 기여의 정도에 따른 분배가 공정하다는 설이다. 사람마다 생존의 필요량이 다르기 그 필요의 정도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Marx [25]에 의해서 주장·제기된 것이고,³⁾ 사회 또는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것은 Thurow [32]의 주장이다. 넷째는 Bentham [11]의 공리주의설을 들 수 있다.⁴⁾ 공리주의에 의하면 효용은 재화의 양의 함수로서 개개인의 효용의 합계가 최대가 되려면 평등분배되었을 때라 한다. 사회의 최대 행복(총효용의 최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평등분배가 가장 공정한 분배라 한다. 다섯째는 Rawls [27]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을 들 수 있다. 로울즈는 분배에 있어 제1원리는 자유의 최우선이며 제2원리는 격차원리이다. 분배에서 주목되는 것이 격차원리인데 이것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불우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최대한으로 높여 주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의 공리주의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공리의 원리(principle of utility)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선택의 원리(principle of self-preference)이다. 공리의 원리는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도 한다. 공리의 원리란 모든 개개인이 행복을 증진시키려 하는가 아니면 감소시키려 하는가의 경향, 또는 이것을

2) Okun [26], pp. 51~90.

3) Marx [25], pp. 315~335.

4) Bentham [7], vol. I, pp. 1~2, vol. IX, p. 123.

시인하려 하는가 아니면 부인하려 하는가의 원리라 한다.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고 개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 그리고 정부의 시정도 한 개인과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리선택의 원리는 이러한 행복을 끊임없이 증진시키려는 경향을 뜻한다. 즉, 개개인은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고통인가를 잘 알고 있으며 또 그 행복에 대한 최선의 판단자(the best judge)는 바로 본인이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자기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경향이 법률적으로는 자유방임의 바탕이 되는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인 자유경쟁, 영리추구 그리고 사유재산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 또는 소득(y)과 행복 또는 효용(u)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 ① 부와 효용 간에는 $u = u(y)$ 의 함수관계가 있다.
- ② 두 사람 가운데 부가 많은 사람이 보다 행복하다는 것이다. 즉, $y_1 \leq y_2$ 면 $u_1 \leq u_2$ 관계가 성립된다.
- ③ 부가 많을수록 효용은 높아지지만 부가 많아지는 정도로 효용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 ④ 사회전체의 총효용을 최대화하려면 ③의 성질 때문에 소득의 평등분배가 최선의 방법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의 총효용 최대화는 평등분배에 의해서 도출된다. 그러나 그 근간은 여전히 자리선택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어 공리주의는 자유경쟁, 영리추구 그리고 재산의 사유제를 낳게 했다. 그 결과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자생하게 되어 가난한 소외계층에 대하여 단순한 자선과 사회복지 증진만이 요구되었을 뿐이다. 여전히 사회의 상층구조는 공리주의가 지배하고 있어 사회의 어두운 면은 상존하게 마련이다. 여기에 새로이 등장한 것이 로울즈의 정의론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벤담의 공리주의는 도덕을 전제한 데 대하여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은 공리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의 행위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도로 정당하고 또 행복을 뒤집는 정도로 잘못된 것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공리의 원리(principle of utility)라고 설명하고 행복이란 즐거움과 고통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모든 인간 행위는 각각 목적이 수반되게 마련이고 그 행위의 규제 방법도 그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그 행위가 옳은 것인가 또는 잘못된 것인가는 그 행위가 즐거움과 고통의 결여로 정의되는 행복이 얼마나 증진되는가로 가능하게 된다. 또 밀은 즐거움의 내용에 대하여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있다고 전제하고 후자인 정신적 즐거움이란 양자를 다같이 경험해 본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자기

의 정신적 충실성 또는 고결함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 준다는 점에서 육체적 즐거움보다는 우선하게 된다는 것이다. 즐거움 또는 행복이라는 질적인 문제를 양으로 바꾸는 데에는 경험이 풍부하고 자기의식과 관찰력이 투철한, 말하자면 공평무사한 방관자(impartial spectator)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행복을 수량화한 것을 효용(utility)이라 하고 이러한 개개인의 효용의 합계를 사회적 효용(social utility)이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밀은 벤담의 최대행복원리를 답습하여 사회 효용을 최대화 하는 행위의 선택을 공리주의의 방법으로 하였다.

벤담의 공리주의와 후일 밀의 공리주의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앞에서 본 자리선택의 원리를 밀은 포기하고 비이기적인 박애(博愛)로 바뀐 점이다. 여기서는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한 로울즈의 비판만을 보기로 한다. 비판의 요지는 두 가지이다. 그 첫째는 자리선택의 원리로서 모든 개개인이 효용(행복 또는 부)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에 대해서이다. 모든 개개인이나 사회가 효용을 최대화하려면 개인이나 사회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기회와 특권을 오로지 효용증진을 위해 주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다 큰 효용(이익, 행복)은 다른 사람의 적은 손실(비효용)을 보상하지도 않으며, 다만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논리적으로 다수의 선(the good)이 옳다(the right)고 주장하는 모순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 사회를 한 개인과 동일시하는 문제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리의 원리를 사회에 적용함에 있어, 사회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을 묶어서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 1인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 이익이란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의 최대 행복, 즉 사회의 최대 효용은 사회의 부(또는 소득)가 평등분배되었을 경우이다. 이것은 개인간의 효용의 차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결함이 내포되어 있고 또 최대 행복이라는 궁극의 목표 선택은 불편(공평무사)의 방관자에 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라는 집단이 마치 개인과 같이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공리주의 비판에 이어 로울즈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정의론을 전개하고 있다.

2. 로울즈의 공정의 원리

서구 사회에서 지난 200년간 법률, 정치 그리고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의 원리는 공리주의가 지배해 왔다. 이러한 공리주의가 1971년 로울즈(John Rawls)의 『정의론』(Theory of Justice)의 등장으로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정의론으로 대체하게 된다. 로울즈는 정의론의 서두에서 흄(David Hume, 1711~1776),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그리고 벤담과 밀은 모두가 위대한 공리주의자, 사회과학자인 동시에 경제학자라고 전제하고 이들이 수립한 도덕적 교의(moral doctrine)는 그들의 광범위한 관심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포괄적인 양식에 부합시키기는 했으나 때때로 그들의 업적을 잊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저평가하고, 제3자의 효용 원리에 대한 비판을 인용하고 있다. 즉, 공리주의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효용이론의 애매한 점을 지적하고 그 원리에 함축된 의미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도덕적 정서(moral sentiment)와는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정의론의 근간이 로크(John Locke, 1632~1704),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그리고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제창한 전통적 사회계약론을 일반화하고 고도로 추상화한 것이라고⁵⁾ 전제하고 위에서 본 공리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비판의 요지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사회제도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왜 '최대 행복의 원리'인가. 그 근거가 애매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① 정의와 본래의 권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면 한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의 만족 달성과 공정으로서의 정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⁶⁾ ② 개인에게 어떻게 분배하는가의 문제는 불문하고 있다. 어떤 경우든 바른 분배는 최대의 행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라 한다. 사회는 가능한 한 효용의 최대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권리와 의무, 기회와 특권 그리고 여러 형태의 재산 등은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⁷⁾ 그리고 ③ 총효용 극대화를 위한 선택에서 한 개인의 선택원리를 사회적 선택에 확장하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즉, 사람들의 연합체를 규제하는 원리가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원리의 확장으로 상정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⁸⁾

둘째는 한 사람의 선택원리를 사회에 확장한다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즉, 사람들의 연합체를 규제하는 원리가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원리로 확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효용의 최대화는 만족의 원천이기는 하나 질은 불문하고 다만 사회복지가 개인의 목적 여하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리주의는 개인을 차별화하는 개인의 자존심을 고취시키는 문제를 전연 고려하지 않고,⁹⁾ 또 개인간의 차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¹⁰⁾

5) Rawls [27], p. viii.

6) Rawls [27], p. 30.

7) Rawls [27], p. 26.

8) Rawls [27], pp. 23~24.

9) Rawls [27], pp. 30~33.

10) Rawls [27], pp. 49~55.

셋째는 공평한 방관자(impartial spectator)에 관한 것으로서, 궁극의 목표 선택은 공평무사한 방관자에 의해서 선택된다고 상정하고 있으나 그 방관자는 공평하다는 것 외에는 허심탄회하고 여타의 원리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타적(利他的)이라고 가정한다면 공평무사한 방관자도 공평무사하다는 성격 외에 자비로운 성격을 부여해도 최대행복원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선형적으로 이타주의에 의존하게 되면 공정 원리의 확고한 기반은 인정받을 수 없다. 공정 원리 필요성의 핵심은 각자가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려 할 때 최소 자원의 제약하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대립을 자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자신의 가치만을 중요시하고 타인의 가치는 서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¹⁾

로울즈는 계약의 조건을 전개함에 있어 최초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자문하고 자기 이익을 차단한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지의 상황을 계약의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라고 정의하고 있다. 선택해야 할 당사자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장막 뒤에서 생각하고, 다만 여러 선택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당사자 자신의 사회적 입장과 자연재산이나 능력, 체력과 지식의 정도는 알 수 없다고 전제한다. 즉, 정의 원리에 대한 선택의 일반사항은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¹²⁾

원초적 상태에서 공정의 요건으로 네 가지의 의문점을 상기시켰는데 그것은 ① 누가 선택할 것인가? ②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③ 어떤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④ 어떤 동기에 의해서 선택할 것인가이다. 이상이 원초적 상태에서의 공정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누가 선택할 것인가”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선택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은 완전 평등한 자격으로 계약(기본구조 선택)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을 원초적 상태에서의 ‘평등의 참여’라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는 원초적 상태에서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기는 하나 기본구조 선택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은 제한되어 있다. 즉, 천부적 자원과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천부적 자원을 서로 알 수 없어 마치 무지의 베일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다. 기본구조 선택에서 다만 제한된 지식만을 활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태를 ‘지식의 제약’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동기에 의해서 선택하는가”는 ‘동기의 제약’이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 기회, 지위 그리고 소득과 재산이라는 사회적 기본재(基本財)를 되도록 많이 가지려는 성향이 있으나 여러 요인에 의해서 그러한 동기가 제한 받게 된다는 것

11) Rawls [27], pp. 183~192.

12) Rawls [27], pp. 136~137.

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된 최초의 상태가 바로 원초적 상태라 한다.¹³⁾

로울즈는 원초적 상태에서 생기는 의문점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답했다 할 수 있다. 즉, 로울즈가 정의에 부합되는 사회적 기본구조를 지배하는 도덕적 원리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접근 수단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바람직하고 실행 가능한 제도 배치를 실현하려 할 때 원초적 상태에서 어떠한 원리들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아보기로 한다. 우선 로울즈는 전통적 개념 구성사항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¹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선택 전략을 수립한다. 이때 그 전략으로 첫째 맥시민 해(maximin solution)와 둘째 기대효용 최대화 전략을 제시하고, 맥시민 해 전략의 장점 세 가지를 들고, 제시한 5개 사항 가운데 선택된 것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이다. 이 정의론은 두 원리로 구성된다.¹⁵⁾

원초적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공정 원리가 도출된 셈이다. 그 두 가지 원리 가운데 제1원리는 각 개인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체계와 양립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전 체계를 최대한으로 갖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1원리의 내용을 풀어 보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즉, 충분히 적절한 제도를 요구할 권리를 다같이 가지며, 그것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와 양립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원리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저축의 원칙에 모순되지 않는 한, 가장 불우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편익(benefit)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기회의 균등조건하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무와 지위가 걸맞아야 한다.

위에서의 두 원리에 대하여 로울즈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고 있다. 즉, 제1원리는 우선순위의 규칙인데, 그것은 자유의 우선성(priority of liberty)이라 할 수 있다. 정의의 원리는 순서문제가 제기된다. 즉, 기본적인 여러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이 제한될 수 있다 한다.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뿐으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자유가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되었을 경우, 그 분산된 자유를 보다 강화할 경우만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등한 자유보다 적은 자유는 보다 적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서 수용될 수 있어야만 한다. 즉, 적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반발하면 그 자유체계는 존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제2원리는 우선순위의 규칙으로서 효율과 복지보다 정의의 우선성(priority of justice over efficiency and welfare)을 뜻한다. 이 제2원리는 효율성의 원리나 이익 합계의 최대화(maximizing the sum of advantages) 원리보다 정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기회는 격차원리를

13) Rawls [27], pp. 17~21, pp. 118~194.

14) Rawls [27], p. 124.

15) Rawls [27], pp. 150~161.

우선하는데 그것은 다음 두 경우이다. ㉔ 기회의 불평등은 기회가 보다 적은 사람의 기회를 보다 많이 해 주는 경우이고, ㉕ 지나친 저축률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완화해야만 한다. 이상에 의해서 정의의 제1원리는 자유의 우선성원리라 하고 제2원리는 격차원리(difference principle)를 포함하게 된 이유를 알게 한다.¹⁶⁾ 자유우선성 또는 자유제일주의(自由第一主義)라는 정의의 제1원리는 모든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자유 보장이 최우선이라는 뜻이며 제2원리인 격차원리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불우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익을 최대한으로 높여 주는 조건과 직업과 지위에 대하여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격차원리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는 만약에 지위나 소득과 부의 분배방식을 어떻게 설정하건 분배총액은 불변이고, 가장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몫을 늘려 줄 수 없는 세계라면, 사회적 지위나 소득, 부의 차이가 없는 완전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만약에 분배방식을 변경하여 가장 불우한 사람에 대한 분배 몫을 높일 수 있으면 그러한 분배방식은 바람직하다. 즉, 자유의 우위와 공정한 기회균등이 충족되는 한 효율성의 기준과 양립되어야 함이 요청된다.¹⁷⁾

로울즈는 어떠한 사회구조이건간에 긴밀하게 짜여진 성질을 갖고 있어 제2원리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긴밀하게 짜여진' 성질이란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기대를 높임에 따라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상태는 지체없이 개선되고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전자의 분배 몫의 어떠한 변화도 후자의 이익과 일치된다. 그 이유는 기대되는 분배 몫의 상승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훈련의 제비용을 받아, 보다 좋은 직무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격차원리는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또는 사회적 정의라 하는데, 이러한 개념은 자유사회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경쟁체제에서 사람이 소득을 얼마나 벌어서 재산을 얼마나 갖는가 하는 것은 개인적 숙련과 행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라 한다.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지위는 누군가의 작위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누구의 지배도 미치지 못한 한 과정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부정이라 하고 이에 대립되는 정의가 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부정한 행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배적 정의는 사회의 정의를 뜻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한낱 허구일 뿐이고, 다만 그것은 세계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라 한다. 사회는 의도하지 않은 진화론적 결과이지 사회정의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 즉 누구의 계획이나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장의 한 질서일 뿐이라 한다. 이런 점에서 하이에크(F. Hayek,

16) Rawls [27], p. 302.

17) Rawls [27], pp. 86~95.

1899~1992)는 사회정의 또는 분배적 정의를 배경하고 있다.¹⁸⁾ 격차원리에 대해서도 비판점이 없지 않다. 그것은 공리주의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로울즈의 생각은 Vickrey [34], Harsanyi [16], 그리고 Sen [30] 등에 의해서 이미 제시된 것과 거의 같다는 것이다.¹⁹⁾

Ⅲ. 불평등과 성장 간의 관계

경제성장과 소득의 불평등도 간의 관계는 마르크스(Karl Marx)가 처음으로 논의했고 그 후 아더 루이스(Author Lewis), 쿠즈넬츠(Simon Kuznets) 그리고 애들먼(I. Adelman)과 모리스(C. T. Morris) 등에 의해서 논의되었다. 마르크스는 처음 1844년 그의 저서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노동자가 부를 생산하면 할수록, 그들의 생산력의 크기와 범위가 확대되면 될수록 그들은 그만큼 빈곤해진다”라고 하였다. 그것은 생산이 증가하면 할수록 노동자계급의 빈곤화가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는 1847년과 1948년 사이에 브뤼셀에서의 독일 노동자에 대한 강연에서 “근대의 노동자 생활수준은 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향상되고 있는가?”라고 자문하면서 “아니다. 반대로 노동자의 재생산 조건 이하로 침몰하고 있다. 노동자는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수는 부의 증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가고 있다”라고 노동자계급의 궁핍화를 강하게 설파했다. 또 『자본론』의 자본축적의 일반 법칙에서도 자본축적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궁핍화를 설명하고 있다. 즉, 그는 “산업예비군의 증대는 취업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 압박의 결과는 그들의 궁핍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으로 보아 마르크스는 자본축적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궁핍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소득불평등 경향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Lewis [23]도 고도성장과 분배의 형평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경제발전과정에서 분배의 불평등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논증했다. 그 후 Adelman and Morris [6], [7]는 고도성장과정에서 분배 상태의 악화, 즉 저소득층의 절대 빈곤화를 주장한 바 있다.

2차대전 이후 중남미와 아세아에서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던 1950년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이 출현되기 시작하였다. 그 하나는 권력형 신흥부호출현, 급격한 농촌인구의 도시 이동으로 도시의 빈민가 형성, 전통가치의 파괴와 더불어

18) Butler [12], pp. 131~132.

19) 崔炳瑞 [4].

어 도시의 자유시민사회 형성,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정치의 민주화를 재촉하면서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때 마르크스 이론이 다시 등장하여 좌경화운동이 일고 있을 때, 아더 루이스의 발전과 형평의 양립불가론이 제기되었다.

1. 쿠즈넬츠의 가설

경제개발과 분배 간의 관계를 말해 주는 이론이 없을 때, 1955년과 1963년 두 번에 걸쳐 쿠즈넬츠의 실증분석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쿠즈넬츠는 ① 성장과정에서 불평등은 악화되는가 아니면 개선되는가? 그리고 ② 불평등의 수준과 장기적 변동양상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프로시아와 삭소니)의 두 시점의 시계열자료와 또 인도, 스리랑카(당시 씨론) 그리고 프에트리코 3개국만의 횡단자료를 분석했다.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두 부문에서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인구이동과 1인당 평균소득, 그리고 불평등도 지표인 분위별 소득배분율 변화를 일정 조건하의 모의실험에 의해서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29년과 2차대전 후인 1947년 두 시점간의 몇 개의 소득분위의 소득배분율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상위 5% 분위군의 소득배분율은 31%에서 20%로 그리고 상위 10% 분위군의 소득배분율은 55%에서 44%로 하락한 데 반해 하위 40% 분위군의 소득배분율은 15.5%에서 18%로 상승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상위 소득군의 소득배분율은 두 기간에 감소한 데 대하여 하위 분위군의 소득배분율은 상승했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소득분배상태는 1929년에 비하여 2차대전 후인 1947년 사이에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또 영국도 1880년, 1910년, 1929년, 1938년 그리고 1947년 시점의 상위 5% 분위군과 하위 85% 분위군, 두 분위군간의 소득배분율의 변동에 의해서 소득분배의 개선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상위 5% 분위군의 소득배분율이 46%에서 24%로 하락했고 하위 85% 분위군도 41%에서 55%로 상승하여 두 분위군간의 소득배분율 격차가 축소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영국에서도 1880년에서 1947년까지 67년동안에 소득의 분배 상태는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독일은 북부의 프로시아(Prusia)와 남부의 삭소니(Saxony)로 나누었을 때, 우선 북부의 프로시아는 1875년과 1913년 두 시점간 상위 5% 분위군의 소득배분율은 26%에서 30%로 상승했고 또 상위 10% 분위군의 소득배분율도 48%에서 50%로 약간이나마 상승했다. 그러나 하위 60% 분위군의 소득배분율은 두 시점간에 별 변동 없이 안정된 상태이다. 즉, 프로시아는 상위 계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다. 독일 남부인 삭소니는 1880년과 1913년 사이에 상위 5% 분위군의 소득배분율은 34%에서 33%로 또 상위 10% 분위군은 56.5%에서 54.5%로 미미하나마 하락하고 있고 하위 20% 분위군의 소득배분율도 15%에서 14.5%로 하락하는 양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당시 독일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여 저개발 상태라 할 수 있다. 경제발전의 정도가 앞서 있는 미국과 영국은 다같이 상위 분위군과 하위 분위군 간의 소득배분율 차가 좁아지고 있어 소득불평등도는 개선되고 있다 할 수 있고 미국과 영국에 비하여 경제발전의 정도가 뒤떨어진 프로시아와 삭소니의 소득불평등도는 약간 악화되거나 안정된 상태라 할 수 있다.²⁰⁾

위의 세 나라 외에 프에트리코, 스리랑카(시론) 그리고 인도 3개국과 공업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 5개국은 경제발전의 정도가 각각 다르다. 이와 같이 경제발전의 단계가 다른 5개국의 횡단자료에서 상위소득분위군과 하위소득분위군 간의 소득배분율의 변동을 보면 경제발전의 정도가 낮은 나라일수록 분위군간의 소득배분율 격차는 커지고, 반면 경제발전의 정도가 앞서 있는 나라일수록 두 분위군간의 소득배분율 격차는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¹⁾

이상 적은 표본에 의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저개발국들의 소득불평등도는 크고 반면 공업선진국들의 불평등도는 개선되었다 할 수 있다. 쿠즈넛츠는 이러한 적은 표본 분석에 이어 1963년 18개국의 자료 분석으로 위의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른 불평등도의 변화 양상을 확인했다.²²⁾ 그 확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상위소득분위군의 소득배분율은 공업국군에 비하여 저개발국가군에서 현저하게 크다.
- ② 저개발국들의 최하위분위군의 소득배분율이 공업국에 비하여 낮기는 하나, 소득격차는 상위소득분위군의 소득배분율보다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 ③ 위 ①과 ②에 의해서 상대적 소득격차는 공업국에서보다 저개발국에서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 의해 처음 제기한 두 가지 문제는 모두 해명된 셈이다. 첫째와 둘째 문제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묶어서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된 셈이다. 즉, 소득불평등도의 정도의 주요 결정요인은 경제개발의 수준인데 그의 변동은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상승하나 절정에 도달한 이후부터 소위 경제발전의 후기부터 그 불평등도

20) Kuznets [20], p. 4.

21) Kuznets [20].

22) Kuznets [21].

는 하향 개선된다는 이론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성장에 따른 불평등도의 변동모양이 역 U자형이라는 이론적 가설이다. 이 이론적 가설 검증을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집중되었었다.

최초로 역 U자형가설에 동조한 연구자는 크래비스(I. B. Kravis)이다. 그는 196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11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소득과 소득불평등도를 미국과 비교하였다. 경제발전의 정도가 미국보다 낮은 나라는 불평등도가 미국보다 높고 경제발전의 정도가 미국과 비슷한 나라들은 미국과 거의 같고 또 발전의 정도가 높은 나라들의 불평등도는 미국보다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불평등도의 변화가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 역 U자형으로 변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1962년에는 오시마(H. Oshima)에 의해서 불평등도의 변화가 역 U자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요지는 불평등도는 상승하는데 어느 정도 경제개발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하향한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자료의 제한으로 완전한 검정은 아니라고 부언했다. 파우커트(F. Paukert)는 쿠즈넬츠의 역 U자형가설을 더욱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연구결과를 1973년에 발표했다. 즉, 56개국의 1인당 GDP와 소득불평등도 지니 계수의 변화를 대비시킨 결과 지니 계수는 상승하다가 1인당 GDP가 301달러에서 500달러군 사이일 때 절정에 이르게 되나 그 이상수준으로 발전해가면서 지니 계수는 하강한다는 쿠즈넬츠의 이론을 검정했다. 이후에도 세계은행의 체네리와 시르큐인(H. Chenery and M. Syrquin)의 1975년의 저서와 아루와리아(M. Ahluwalia)의 논문,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의 Lydall [24]과 Jain [19]은 62개국의 조사분석을 통한 연구저서 등에 의해서도 쿠즈넬츠 이론이 검정된 셈이다. 그러나 아루와리아는 새로운 연구에서 그 이론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게 된다.²³⁾

2. 에티킨슨의 반론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불평등이 완화·개선된다는 소위 쿠즈넬츠의 역 U자형가설이 제시된 이후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영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그것이 다시 급상승세로 변동하고 있다는 것이 Goodman and Webb [15]에 의해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개요와 원인을 처음 발표한 것은 Thurow [33], Hills [18], 그리고 Atkinson [10]이 거의 동시적이었다. 이들 가운데 에티킨슨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 개요를 설명하였다. 에티킨슨의 이론 개요를 설명한다.

영국 왕립경제학회 회장 에티킨슨(A. B. Atkinson)은 1996년 4월 스안시

23) 尹起重 [2], pp. 27~36, pp. 239~246.

(Swansea)에서 개최된 왕립경제학회에서 1995년 12월 22일 서거한 제임스 미드 (James Mead) 교수를 추모하는 “냉대에서 벗어나는 소득분포” 제하의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서 그는 우선 과거 50년간 왕립경제학회지(*Economic Journal*)를 분석한 결과, 소득분포에 관한 논문은 연평균 1.5편 비율로 4%밖에 안된 점을 들고 그 동안 학계에서 소득분배 문제가 소외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 하였다. 첫째 경제 논쟁의 중심 과제인 거시경제변수와 소득불평등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경제적 성취와 소득분배 간의 상호관계는 무엇인가? 셋째 개인소득, 가족소득 그리고 가계소득의 변동을 우리는 경제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위의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영국과 OECD 각 국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다음의 세 가지가 발견되었다.

- ① 영국은 198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 ② 개인소득의 변동은 총량의 경제적 성취 영향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
- ③ 불평등도의 변동은 장기적인 경향이라기보다 도리어 토막(episodic)으로 표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 같다.

세부적인 불평등의 변동 양상을 보면 영국은 1980년대 이후 전대미문의 반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니 계수로 미국은 1968년부터 1991년 사이에 10%나 상승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OECD 각 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같이 1980년대부터 불평등은 반등 상승하고 있었다 한다. 위 세 가지의 새로운 발견 사실을 근거로 1955년 이후 최근까지 지배해 온 불평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이론을 말하는 쿠즈넬츠의 역 U자형가설을 뒤집었다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우는 1967년까지 그리고 영국은 1976년까지 불평등도가 경제성장에 따라 떨어지고 있었으나 미국은 1968년부터, 영국은 1977년부터 거시경제지표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평등도가 반등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쿠즈넬츠의 역 U자형(또는 쿠즈넬츠 곡선) 변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쿠즈넬츠 이론은 불평등도가 경제성장에 따라 역 U자형으로 변한다 했으나 현실은 그 변동이 곡선이 아닌 토막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소득불평등도 지니 계수는 하강하고 있었으나 1977년 이후 그것으로 3개의 토막으로 나누어 변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1977년부터 1983년까지 서서히 증가하다 1984년부터 급상승하고 있고 또 1990년 이후는 그것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거의 불변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다. 여기에 새로이 등장한 토막(episodic)이라는 말은 에티킨슨 자신이 처음 쓴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쓰던 용어로 리다 (M. W. Reder)가 1962년 사회과학 한 백과사전에 ‘임금’을 집필하는 데에서 기술진

보와 임금격차에서 임금의 변동을 토막으로 표현했고 1991년에는 도노후와 히크맨(J. N. Donohue III and J. Heckman)이 흑인의 경제활동 변동을 표현하는 데 '토막'이란 용어를, 1981년에 기덴스(A. Giddens)는 사회발전단계를 설명하는 데 '토막'이라는 용어를 썼다 한다. 이상으로 문제 제기의 첫째는 설명된 셈이다.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 성취와 소득분배 간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우선 경제적 성취에서 기능공과 미숙련공의 수요·공급에 의한 임금격차의 확대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서나 영국에서 모두 미숙련공에 비하여 숙련공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숙련공의 임금 또한 크게 하락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고, 숙련공 수요 증가의 원인은 기술의 변화를 들고 있다. 국제 무역은 제조업에서의 남북간의 교역 증진, 그리고 자동화의 도입과 정보기술분야의 기능공 수요를 증가시키는 편향된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ical change)에 따른 편향된 기능공 수요 증가로 임금분포의 퍼짐이 커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계소득에 영향을 주어 개인소득의 불평등도를 증대시키는 한 요인이라 한다. 그리고 셋째의 가계소득의 원천별 변동에 대해서 그 동안 가계소득은 그 원천별로 큰 변동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근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월급과 임금의 가계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1973년에는 83%이었으나 1983년에는 75% 그리고 1993년에는 73%로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데 반해 자본소득은 1973년에서 1993년 사이에 7%에서 11%로 그리고 연금은 이 기간에 3%에서 6%로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장금은 1983년에서 1993년 사이에 적어졌는데도 가계소득의 14%나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1973년 9%이던 것이 1983년에는 16% 그리고 1993년에는 14%나 된다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소득인 근로소득은 점차 그 비중이 적어지는 반면에 자본소득과 연금의 구성비는 적은 비중이기는 하나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종합적으로 개인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한 원인이라 한다. 이상의 요지는 쿠즈넬츠의 불평등 변동이론을 반박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불평등의 심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3. 불평등의 변동기구

위에서 에티킨슨의 연구개요는 불평등 변동의 특징과 그의 상향추세의 설명인 데 반하여 Aghion *et al.* [8]은 영국, 미국 그리고 다른 OECD국들에 대한 불평등의 상향 변동을 중심으로 미시이론으로 그의 변동기구를 설명하고 있다. 설명방법은 저자 자신들의 연구논문을 포함하여 1970년 이후 발표된 논문들을 조사·분석 체계화한 것이다.

1) 일반적 동향

불평등과 성장과의 관계는 과거 1세기 이상이나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사이었다고 전제하고 저자들은 쿠즈넬츠 이후, 즉 1970년대 이후의 성장과 불평등 간의 관계에 관한 발표논문 등을 조사·분석하고 양자간의 관계에 관한 경제이론을 정립하고 있다. 이론 구성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성장과 불평등 간의 단순한 관계이며 둘째는 성장이 불평등을 변동시키는 이론적 기구의 해명이다. 이론 구성에 앞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앞으로 정립할 이론 구성의 기반을 삼고 있다. 그 첫째는 쿠즈넬츠의 가설이 미국에서나 OECD에서 다같이 실증되기는 했으나 15년 전부터 하향세인 소득불평등도 변동이 역전하여 급상승하는 것, 이것은 이론 구성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그 동안의 성장과 불평등 간의 변동에서 '순조로운 순환'(virtuous circle)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한 것이다. 이것은 보다 낮은 불평등은 성장을 촉진하고 다시 저속 성장은 불평등을 저하시키는 교차적 순환을 뜻하는 것으로서 성장과 불평등 간의 동학적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불평등의 하향세가 역전하여 급상승하던 과거 20년간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 현상을 들고 있다. 무역 자유화, 기술변화 그리고 새 조직형태의 등장으로 이것은 경제성장을 요소별로 분해한 것으로서 이들 각각의 동태가 불평등을 어떻게 변동시키는가를 보고 있다. 또 불평등을 부의 불평등과 임금불평등으로 나누고, 가계소득도 원천별로 나누어 보고 있다.

첫째, 불평등과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실증분석에서 검증되었다 한다. 그것은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경우 성장과 형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舊이론**, 즉 형평과 효율이 상충된다는 구이론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며 또 불평등이 클수록 성장률을 저하시킨다는 불평등의 부정적 효과와 재분배가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재분배의 긍정적 효과가 검증되었다는 것이다. 성장에 대한 불평등과 재분배의 영향에 관한 전통적 이론은 실증분석에 의해서 무너졌다 할 수 있다. 즉, 불평등은 자본축적과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전통적 이론이 허물어진 셈이다.

둘째, 성장이 불평등을 변동시키는 몇 가지 기구를 해명하게 되는 이 이론도 여러 사람들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해서 구성된다. 우선 과거 20년간의 소득과 개인소득의 변동 양상을 에티킨슨의 실증 예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즉,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의 불평등은 역전하여 급상승하고 있는 데 반해 독일은 안정상태이고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캐나다는 하향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불평등에 대한 성장과 기술 변화의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불평등 변화의 정도는 영국의 경우 1980년에서 1990

년 사이에 1분위 대 9분위의 비율은 2.53배에서 3.21배로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4.76배에서 5.63배나 벌어졌다 한다. 이러한 임금격차, 즉 근로소득의 불평등도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학력간, 연령계층간 그리고 직종간에 1970년대 이후 현저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의 불평등도가 커지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기술변화에 따른 기업의 기능공 수요증가를 들고 있다. 기능공의 수요 증가는 그 임금의 상승을, 반면 미숙련공의 임금은 하향하는 경향이다. 둘째는 두 가지 복합요소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임금이 비교적 저렴한 동아시아에서의 기능공을 수입에 의존했으나 이들 개발도상국의 수출 주도의 고도성장으로 인력수입이 어려워진 점 그리고 직장에 컴퓨터의 급속한 확산으로 기능공 수요가 증가한 점을 들고 있다. 즉, 기능편향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와 동아시아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의 기능공 수요증가에 따른 임금인상을 들고 있다. 그리고 셋째는 기업 내부조직의 변화를 들고 있다. 작업의 동질적인 것끼리 기업의 조직을 수평적으로 분산시켜 기업의 의사결정기구를 단순화시키면 내부의 임금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상은 최근의 동향 개요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과거 20년간 불평등이 역전하여 급상승하는 원인을 앞에서 들은 바와 같이 세 가지 부분, 즉 무역자유화, 기술변화 그리고 조직의 변화로 나누어 간략하게 설명한다.

2) 무역자유화

헥셔-오린 정리에 의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에서 선진국의 임금불평등이 높아진다는 일반 이론을 근거로 동아시아국들과 교역한 미국과 영국에서 실증 분석한 결과 이들 두 나라는 다같이 임금격차의 확대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과거 20년간 교통시설의 발전과 고도 성장을 이룩한 동아시아에서의 미숙련 노동집약상품의 대영 및 대미 수출증가는 영국과 미국의 기능공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고 한다. 즉, 영국과 미국의 기술 노동력 임금 양등은 교역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기능수준이 높은 경제와 수준이 낮은 국가간의 교역은 내수용 미숙련 노동집약적인 상품의 수요를 회생시켜서라도 기능공 집약적인 상품수요 증가를 유발하게 하고 나아가서 기능편향기술의 변화는 전 산업의 노동력을 기능공으로의 대체를 유도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금격차 내지는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커지게 된다.

무역자유화에 의해서 관리직중 근로자의 분배분의 변동을 분해했는데 미국의 경우 1979년에서 1997년 사이에 관리직 근로자의 분배분은 70%나 상승했고 영국의 경우는 1979년부터 1990년 사이에 82%나 상승했다 한다. 이외 학력간의 임금격차가 커

지는 것도 검증되었다. 또 중간재 가격을 하락시키는 무역자유화는 노동수요를 증대시킬 뿐이지 최종재의 수요를 증대시키지는 않는다는 것도 검증되었다. 독일에 대한 연구에서 미숙련 노동자가 숙련노동으로 대체되기보다는 기계로 대체된다는 것도 분석되기는 했으나 무역자유화에 의해서 미숙련노동을 대체시킨 중간재와 기계가격은 하락하고, 반면 숙련노동수요는 중간재와 기계가격 하락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설과 제조업의 두 부문에서의 미숙련 노동력과 기계 간의 대체탄력성은 0.14와 0.34로 높은 편이다.²⁴⁾

3) 기술변화

기술변화는 노동수요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임금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그것은 근로자 상호간에 또 학력계층내에서 새로운 능력 차를 조성시키기 때문이라 한다. 기술변화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일반목적 기술변화(General Purpose Technologies Change : GPT), 둘째는 기능편향기술변화(Skill-biased Technical Change), 그리고 셋째는 체화된 기술변화(Embodied Technical Change)이다. GPT 변화는 장기적으로 생산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발명을 뜻한다. 기능편향기술변화는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을 초래케 하는 것으로서 R&D와 컴퓨터 도입에 의한 기술변화를 뜻한다. 그리고 체화된 기술변화는 우마차, 트럭 그리고 항공기와 같이 수송수단의 변화가 자본재로 투자된 연륜부(vintage) 자본재를 말한다.

GPT 변화는 전 경제조직에 영향을 주는 기술발명이라 할 수 있어 이것이 장기간 총생산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동안 경제의 조정 때문에 순환변동을 거듭하면서 전 경제에 비선형으로 확산한다는 것이다. 또 구 GPT에서 신 GPT로 넘어가는 과정은 대체로 두 기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 기간은 신 GPT를 도입하는 각 산업은 기능공 모두를 흡수하지 못한다. 이때 기능공의 일부는 미숙련공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의 노동시장은 기능공과 미숙련공이 분할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다음 과정에서는 신기술을 채용한 일부산업에서는 기능공 모두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은 미숙련공이 있는 한, 숙련공과 미숙련공 간에 배타적으로 분할하게 된다.

GPT 변화의 첫 단계, 즉 시장이 분할되지 않았을 때는 기능공 수요가 증가하며 나아가서 임금격차 확대에 따른 임금불평등 심화현상이 생긴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는 기능공의 공급도 증가되어 임금불평등은 다소 해소된다. 이런 이유로 임금불평등은 신기술의 도입과 쇠퇴를 거듭하는 동안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토막(episodic)

24) Atkinson [10].

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기능편향기술변화는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이론이 제시되어 이것을 기능편향기술 변화 가설이라 한다. 기능공의 분배율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는 실증분석 결과 R&D와 컴퓨터 사용이 검증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능편향기술의 변화가 확실하게 진행되었음에도 1980년 이후 전 요소의 생산성 성장률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다. 한 연구에서 1973년 이후 전 산업에서 전 요소의 생산성 성장률은 하향세이었다 한다. 즉, 미국의 경우 1950년부터 1973년 사이에 전 요소의 생산성은 연평균 1.6%씩 또 1973년 이후 1989년 사이는 0.47%씩 향상되었다 한다. 또 영국의 경우는 1950년대에서 1973년 사이에 1.05%씩 그리고 1973년부터 1989년 사이에는 0.56%씩의 성장률로 향상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생산성 성장률의 하향경향은 기능편향기술 변화 가설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능편향기술의 변화 분석에서 중요한 관점은 그것이 비선형적이라는 점이다. 체화되지 않은 기술진보에는 새로운 GPT의 출현은 기능공 임금에 더한 특별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습득의 초기단계에서 기술적 실험의 노동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공 임금의 특별수당은 점차 적어져 드디어는 없어지는데, 이 시기는 대부분의 부문에서 새로운 GPT로 전환하고 그리고 기능공 공급이 상승세를 유지한 이후부터이다. 마찬가지로 체화된 기술 변화도 GPT의 탄생과 더불어 그 지식이 확산될 것이므로 계층내부의 임금불평등이 생기고 또 그것이 심화된다.

모든 근로자가 이러한 기술변화의 경험을 하게 되고 새 기술이 확산되면 임금불평등의 증가는 일시 정지하게 된다. 이러한 임금불평등의 변동기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쿠즈넬츠 곡선의 작동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불평등이 처음에는 상승하다 하강하는데, 이 경우는 계층내부의 불평등변동이다. 불평등이 하강하는 것은 신기술의 과도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GPT 신기술의 탄생 이후 15년 내지 20년에 불평등이 하강하는 것을 실증분석에서 입증시키고 있으며 실제 1990년 중반부터 기술임금의 특별수당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동은 학력계층과 연륜계층 내부와 계층간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기구는 기술변화가 자본재로 체화될 때 교육효과에 의해서 임금불평등을 변동시킨다. 그것은 구기술이 신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그리고 유사한 초기 기술간의 기술임금의 분산을 축소시키기 위해 종횡으로 노동 이동이 진행하게 된다. 다른 한편에서 교육은 기술간의 이전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또 첨단기술의 재배치를 촉진하게 된다. 이 과정은 임금불평등에 대한 교육효과가 애매한 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확산 특히 현장학습을 통해서 불평등 심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조직의 변화

조직의 변화와 임금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최근 임금불평등의 심화가 조직변화 때문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주장을 논의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가설과도 조직의 변화 개요를 간략하게 들어본다. 우선 조직변화와 임금불평등에 대한 두 가지의 가설은 ①기술변화는 조직의 변화를 초래케 한다. ②기업조직의 변화가 임금불평등에 주는 영향은 기업내부의 임금불평등 문제인가 아니면 기업간의 임금불평등 문제인가에 따라 다르다. 첫 가설은 기업조직 변화의 원천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금불평등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조직의 변화 개요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조직의 변화란 다음을 말한다. ①기업내부의 분산된 의사결정기구 그리고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직적 계층조직을 축소시켜 수평조직화하는 한편 사람 수도 축소시킨다. ②작업은 팀 형식의 집단조직화. ③ 모든 수직조직의 수평조직화 등을 들 수 있다. 상위계층인 감독자나 관리직과 기능공동의 하위직 간의 임금격차가 상승하는가 아니면 감소하는가는 작업성질의 범위나 회사방침에 따라 달라진다. 최종적으로 분할은 기업내부의 기능구조 동질화를 가져오게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기업내부의 임금불평등을 감소시키게 한다. 약간의 어려운 일들을 하위직에 이양하면 최고경영자의 문제해결방식을 단순화시키게 된다. 또 의사결정권이나 작업을 부문별로 분산시키는 것은 최고경영자와 하위직 간의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분할한다는 것은 기업내부의 기능과 기술구조를 부문별로 보다 동질화시키게 되며 나아가서 임금불평등을 축소시키게 된다.

전반적으로 조직의 변화는 임금불평등에 대하여 애매한 영향을 주는 것같이 보인다. 사실 유기적 기업으로 진화됨에 따라 불평등은 심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조직의 수평화에 의해서 생기는 기술변화와 의사결정권의 대표제의 실시 여부에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기술구조 동질화 진행에 따라 불평등(기업내부불평등)은 기업간 임금불평등 변동의 크기에 의해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불평등이라는 용어로 조직변화를 평가하는 우리의 짐작은 인적자원관리면에서 기업이 선택한 유연성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만약에 외부적 유연성에 의존한다면 기업은 미숙련공을 해고하고 노동시장에서 기능공을 신규채용하는 인적자본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된다. 이러한 전략은 기능공 수요증가 때문에 계층간의 임금불평등 심화를 한층 부채질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기업이 내부적 유연성에 의존한다면 기업은 내부승진제에 의해서 상층부의 필요인력을 충당하게 한다. 내부승진제에 의한 문제점은 인력의 순환제 배치나 사내훈련에 의해서 해결하게 한다. 두 전략간의 차이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독일의 비교로써 분명해진다. 전자는 외부유연성에 그리고 후자는 내부적 승진제를 선택한 것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임금불평등은 1980년대 초기부터 미국과 영국에서는 급상승하는 데 반해 일본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독일은 도리어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임금불평등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IV. 불평등과 경제적 후생

1. 불평등 척도

소득분포의 불평등도 측정 목적은 단순히 소득이 각 개인(또는 가계)에게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확률분포에서와 같이 분포의 상태를, 즉 분포의 퍼짐 지표로서 분산 척도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득분포의 모양은 일반 확률분포에서와 같이 대칭이 아닌 비대칭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비대칭을 전제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파레토 분포 또는 지니 집중지수 등 이의 수많은 방법들이 고안되었다. 그러나 제시된 여러 척도는 파레토 계수나 지니 집중지수에서 보듯이 불평등도의 상대적 평가가 불가능하다. 즉, 완전평등 또는 완전불평등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평가가 불가능하므로 대안으로 개척된 것이 로렌즈 곡선(Lorenz curve)이다. 이것은 완전평등선과 로렌즈 곡선 간의 면적을 완전평등선 한쪽의 직각삼각형에 대한 상대면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도형적 표현보다는 산술적 기술 방법으로 그의 상대면적을 구하는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가 고안되었다. 이것은 각 개인소득간의 상대적 평균편차를 2분의 1로 한 것이다. 이 값은 바로 로렌즈 곡선상의 상대면적과 일치된다. 경제학적 의미부여 없이 단순히 불평등도 정도만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기술적 척도(descriptive measure)라고 한다.

기술적 척도와는 달리 Dalton [13]은 공리주의 사상에 의거하여 실제의 소득분배 상태의 사회총효용과 그 총소득이 평등분배되었을 때 얻어지리라는 총효용과의 비율로서 불평등도 지표를 삼았다. 그 척도는 다음과 같다.

$$D = \frac{\sum_{i=1}^n U(y_i)}{nU(\mu)} \quad (1)$$

식 (1)에서 분자 부분은 개인소득 y_i 에 따른 개인 효용의 합계로서 총사회후생이라 할 수 있고 분모 부분은 소득이 평등분배되었을 경우의 효용의 최대치, 즉 사회적 후생의 최대치이다. 만약에 척도 D 가 0.80이라면 현재의 총소득보다 20% 적은 총소득으로도 평등분배한다면 현재와 같은 총사회적 후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척도는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마치 일정 강우량에 대하여 농산물의 성장기간에 강우량이 평등할 때와 한 시점에 집중되었을 때의 농산물 수확량에 대한 효과를 보듯 소득도 평등분배되었을 때 사회의 총효용이 최대가 된다는 관점에서 얻어진 척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주관적 효용이 모든 사람이 다 같다는 것, 즉 사람마다 동일한 효용함수를 적용한 점, 둘째, 달톤의 효용함수가 1차변환했을 때 불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점, 즉 기수적 효용은 임의의 정의의 1차변환에 관하여 단일의 값을 갖게 되므로 달톤의 척도는 특정의 선정된 변환에 의존하게 되어 임의값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식 (1)에서 분자 부분의 재관화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넷째, 가령 A 와 B 두 사회에서, 소득분포 상태가 같으나 로렌즈 곡선은 서로 교차된다 할 때 이 두 분포를 차등화하지 못하는 점을 들고 달톤 척도의 결함이라 한다.

Atkinson [9]은 달톤 척도의 문제점을 이상과 같이 들고 총소득의 분배상태에 대하여 우선 '평등분배 등가소득'(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income)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분배된 총소득이 구성원 전원에게 분배되었을 때의 총사회적 후생과 맞먹는 1인당 소득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불평등도 척도는 불평등한 소득분배에 의한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등가소득의 부족분에 의해서 평가하려는 것이다. 즉, 소득분배의 불평등 상태에서의 사회적 후생의 감소 없이 총소득을 평등분배함으로써 총소득을 몇 % 감축시킬 수 있는가의 정도로 계측된다. 실제의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사회후생을 저하시키지 않고 총소득을 평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총소득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에티킨슨의 불평등도 척도의 정의식은 다음 식 (2)와 같다. 즉,

$$I = 1 - \frac{y_{EDE}}{\mu} \quad (2)$$

평등분배 등가소득 y_{EDE}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보면

$$y_{EDE} = [\sum y_i^{1-\epsilon} f(y_i)]^{1/(1-\epsilon)} \quad (3)$$

식 (3)을 식 (2)에 대입하면

$$I = 1 - \left[\sum \left(\frac{y_i}{\mu} \right)^{1-\epsilon} f(y_i) \right]^{1/(1-\epsilon)} \quad (4)$$

2. 척도와 후생

알의 달톤이나 에티킨슨의 불평등도 척도는 사회적 후생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규범적 척도(normative measure)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센(Amartya Sen)은 보다 정확한 사회적 후생함수의 계측 수단으로 우선 '기능'(functioning)과 '잠재능력'(capability)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기능'이란 개인의 후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생활의 질'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영양상태, 피할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있지는 않은가, 일직 죽게 되지는 않은가, 그리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사회생활에 폭넓게 참여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잠재능력'은 가치 있는 '기능'성취를 위한 기회이며, 동시에 개인의 복지 평가의 기반이기도 하다. 한편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의 조합인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반영하는 '기능'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이 개인 복지의 구성요소이므로 '잠재능력'은 개인 복지를 달성시키기 위한 자유인 동시에 달성된 복지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²⁵⁾

개인 복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하나는 개인이 처한 입장에서 달성한 도달(attainments)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달성할 수 있는 최대수준에 비하여 어느 정도 미치지 못했는가의 차, 즉 최대의 달성 수준에 미치지 못한 '부족분'(shortfalls)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각 개인의 평등문제를 논의할 때도 '달성(도달)정도의 평등', '부족분 평등'의 두 가지 기준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달성의 평등을 알고자 할 때는 실제 달성한 수준의 비교로써 알 수 있고 또 부족분의 평등을 알고자 하면 각 개인이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에 비하여 실제의 도달이 어느 정도 부족한가의 정도 비교로 알 수 있다. 인간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달성의 정도를 파악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다. 가령 한 사회에 A와 B 두 사람이 있다 할 때 A의 최대 달성 수준은 y라 하고 B는 2y 수준이라 할 때, 도달의 평등은 B의 2y 수준을 A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억제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도달의 평등은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이하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하는 비효율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부족분의 평등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신체적 장애

25) Sen [29], p. 39.

자와 일반 사람을 대비해 생각할 때 장애자에 대하여 도달의 평등을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그것은 일반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능과 장애자의 최대한의 기능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대의 기능에 비하여 장애자가 도달할 수 있는 것과의 차이인 '부족분'을 장애자에게 부여하여 도달의 평등을 이룩하기보다는 도리어 장애자의 기능을 최대화하고 그에 미치지 못한 부족분의 평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공정한 처사라 할 수 있다.²⁶⁾

불평등 평가를 위해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는 사회적 공정분석을 위한 것으로 이것은 공정의 정의로서 사회의 기본구조 선택을 위해서 불평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후생경제학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서 소득벡터가 사회적 후생을 결정한다는 가정하에 불평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달톤과 에티킨슨의 선구적 연구로 후생에 의거한 불평등 평가가 널리 알려져 있다. 에티킨슨 척도의 특징은 ① 총소득의 감축 정도가 평등분배된 등가소득을 기준으로 한 점, ② 사회적 후생함수가 소득벡터만의 함수라는 점, 그리고 ③ 총소득의 평등분배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보장의 전제이다.

에티킨슨의 척도는 이상과 같은 탁월성이 인정되지만 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그 하나는 그 척도가 직관에 반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소득의 불평등도와 효용의 불평등도 간에 서로 모순되는 점이다. 첫째 이 척도는 규범적 척도인 동시에 기술적 척도이기도 하다. 이런 양면성 때문에 직관에 반하는 경우가 있다. 예로서 A와 B 두 사회에 각각 두 사람씩 있다 할 때 A사회는 100의 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즉, $A = (0, 100)$ 이고 B사회는 100의 소득이 두 사람이 고르게 50씩 분배되었다 할 때, 즉, $B = (50, 50)$ 로 B사회는 평등분배된 데 반해 A사회는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어 불평등도는 당연히 B사회에 비하여 A사회가 높게 계측되어야 하나, 결과는 두 사회의 에티킨슨의 불평등도 척도는 다같이 0이 된다.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⁷⁾

$$I_A = 1 - \left(\frac{1}{50} \times \frac{1}{2} + \frac{100}{50} \times \frac{1}{2} \right) = 1 - 1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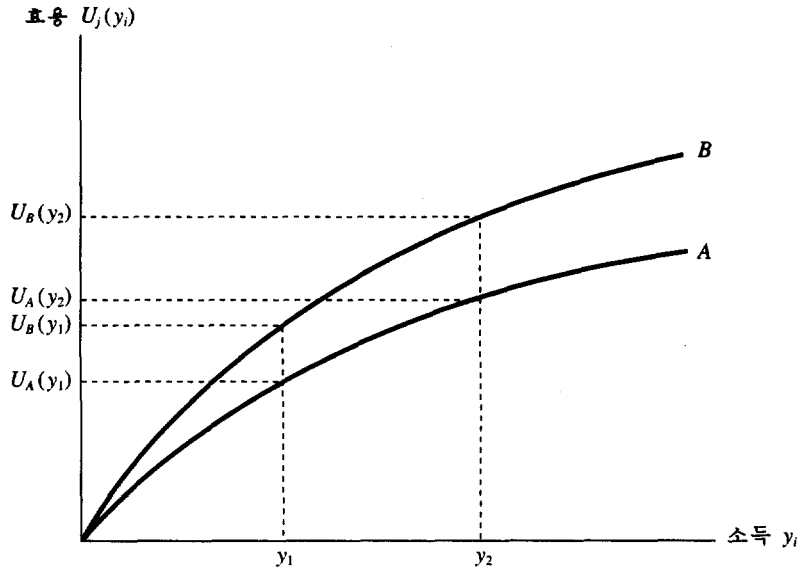
$$I_B = 1 - \left(\frac{50}{50} \times \frac{1}{2} + \frac{50}{50} \times \frac{1}{2} \right) = 1 - 1 = 0$$

두 번째는 효용의 불평등도와 소득의 불평등도 간에 모순되는 점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소득증가에 비하여 한계효용의 체감 정도가

26) Sen [29], pp. 89~93.

27) Sen [29], p. 39.

〈그림 1〉 효용과 소득불평등도 비교



낮은 준 오목(quasi concave)의 효용함수면 불평등도는 개인 효용의 불평등도와 완전 반대 방향으로 제측된다. 즉, 한계효용이 서서히 체감하면 소득불평등에 의해서 생기는 총효용의 손실이 적어진다. 따라서, 불평등도는 상승하던가 반대로 감소하게 된다. 사람들의 효용이 불평등할수록 불평등도는 적어진다.²⁸⁾ 그러나 불평등도를 사회적 후생함수로서 소득분배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소득이나 효용의 불평등도 척도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여기에 두 소득에 따른 불평등도, 소득증가에 따른 한계효용 체감이 다른 두 효용함수 A와 B에 대하여 그림과 더불어 각각의 불평등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의 불평등도

$$I_y = \frac{y_2}{y_1}$$

효용함수 A의 불평등도

$$I_A = \frac{U_A(y_2)}{U_A(y_1)}$$

28) Sen [31], p. 95.

효용함수 B 의 불평등도

$$I_B = \frac{U_B(y_2)}{U_B(y_1)}$$

〈그림 1〉에 따라 세 불평등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즉,

$$I_A < I_B < I_Y$$

V. 한국의 불평등

한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경제발전도 획기적으로 달성했고 분배의 형평도 경제발전이 못지 않게 개선되었다 할 수 있다. 농업국가로서 농경지가 일부 지주에 편중되었으나 1949년의 토지개혁으로 농경지는 농민인 경작자에게 분배되어 이것만으로도 분배의 형평은 크게 발전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동란과 전란으로 인해 파괴된 산업기반과 산업시설을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62년부터 실시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분배의 형평은 현저하게 개선되어 가고 있었다.

1960년대 초 한국인구의 50%가 절대빈곤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그 후 5년이 경과한 1965년에는 절대빈곤이 40%로 감소되었다. 절대빈곤의 인구비가 40%나 된다는 것은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빈부격차의 확대 현상은 도시나 농촌 다같이 공통적이기는 하나 도시의 경우 더욱 심각하였다. 이러한 도시빈곤의 심각성이 경제개발계획으로 실업이 흡수되어 가고 또 농촌에서의 이농자가 도시로 유출되어 산업에 흡수되면서 분배의 형평은 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배 개선의 진행은 산업화에 따른 필연적인 노사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노동 3권을 유보하는 긴급조치와 뒤이은 유신헌법의 발효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유향파동으로 도시가계소득의 불평등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불평등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부문에서 가계소득을 대상으로 불평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시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도시근로가계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가계조사의 표본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그것은 조사할 때마다 근로가계의 규모가 약간씩 변동하고 또 표본설계를 개편할 때마다 그 크기가 변동하기

때문이다. 근로가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외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

농가계조사는 1998년까지 농림수산부의 농업통계관실에서 관장·조사하던 농가계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가계조사에서와 같이 농가계조사의 표본크기도 연도에 따라 다소의 변동이 있는데 그 사정은 표본설계를 개편하는 데 따른 표본크기의 변동과 조사할 때의 표본의 자연적 사멸에 기인한다. 그리고 농가계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구성요소의 합체인 농가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 양자간의 비율변동만을 보게 될 것이다.

앞에서의 도시가계 소득불평등이나 농가계 소득불평등을 설명한 후, 부에 관한 소유의 불평등은 1989년에 토지공개념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불평등 척도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지니 계수를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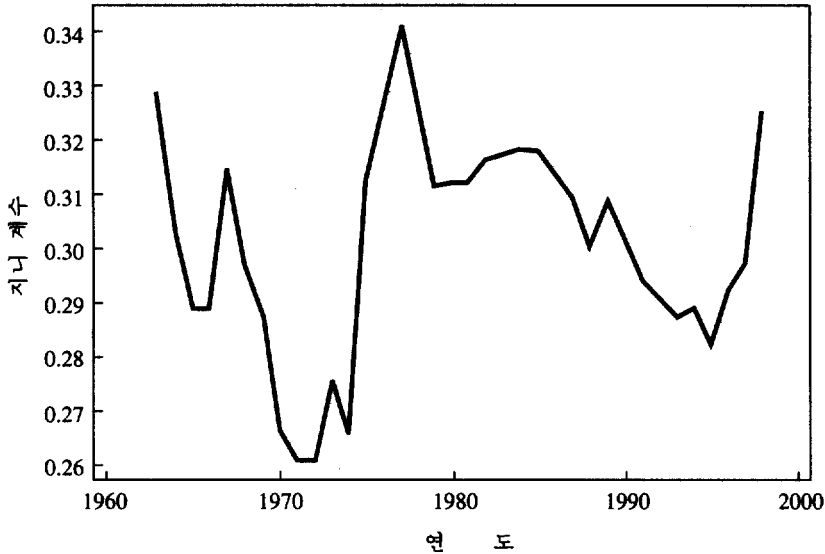
1. 도시가계소득

도시근로가계소득의 불평등은 1963년 이후 1973년까지 개선되었는데,²⁹⁾ 이것은 산업화과정에서 많은 빈곤인구를 흡수했기 때문이다. 1977년도에는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라는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노사간의 갈등 때문에 정부는 1970년에 노동 3권을 유보하는 긴급조치의 발동과, 그 뒤를 이어 1973년에는 유신헌법을 발표하였다. 분배의 형평화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불평등은 악화되기 시작한다. 설상가상으로 3차에 이은 석유파동과 제4공화국의 붕괴를 거쳐 1985년까지 이어진다. 1986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불평등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6년부터 다시 악화되기에 이른다.³⁰⁾ 불평등이 개선되던 1986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국면을 분석해 보면 첫째 노동시장의 민주화 열풍으로 광범위한 파업과 노동조합운동이 활발해진 때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외부채가 현저하게 개선되어 가고 있었고 1987년과 1988년에는 무역수지가 흑자이기는 했으나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가지는 못했다. 이러한 외환사정에 힘입어 원화가치는 상승세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 가계의 소비 진작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즉, 이러한 가계의 소비진작은 이미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구매력 실현을 만들어 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구매력의 실현은 아파트등의 주택 수요급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매력이 커진 이유는 원화가치의 상승뿐만이 아니고

29) 尹起重 [2], p. 277.

30) 尹起重 [2], p. 297.

〈그림 2〉 도시근로가계 소득불평등도(1963~1998)



우선 임금상승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건설업에서의 노동수요급증을 들 수 있다.

불평등이 개선되는 기간을 1986년부터 1996년까지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의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15%나 되며 특히 아파트 2백만 호 신축이 발표되고 신축이 시작되던 1988년과 1989년 1년간의 임금상승률은 22%나 되었다.³¹⁾ 또 악화되기 시작한 1974년 이후 가계소비증가와 임금상승과 대비해 보면 임금이 약 3.5배나 더 상승했다. 그러나 주거비의 변동은 이 기간에 거의 없었다. 이것은 가계소비에서 주거비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아파트의 공급가격이 실질가격보다 낮게 공급한 데에도 한 원인이 있다 하겠다.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OECD 각 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는 1990년대 후반부터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던 1997년부터 불평등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것은 높은 가계의 구매력이 해외로 전환되면서 국내의 투자 감퇴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임금격차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즉, 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퇴출된 인력은 보다 낮은 임금도 감수하게 되고 기업내부에 잔존한 인력은 효율위주로 임금수준은 보다 높아지게 마련이다. 이것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미 경험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불평등의 변화는 쿠즈넬츠의 역 U자형가설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할 수 있고 도리어 에티킨슨의 이론에 부합되는 변동이라 할 수 있다. 즉, 그 변동이 경제성장에 따른 곡선이 아니

31) 한국노동연구원 [5], p. 104.

고 거시지표의 변동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외적인 여러 요인에 의해서 토막으로 이어지는 변동이라 할 수 있다.

도시가계소득의 불평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임금격차의 추이를 보면 1980년 이후 1995년 사이에 학력별이나 연령별 임금격차는 감소하는 데 대하여 기업의 규모별로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제조업의 경우 기업규모를 29인 이하 규모와 500인 이상 규모 간의 임금격차는 1980년에 107%이던 것이 1995년에는 140%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학력간의 임금격차는 축소되고 있다. 즉, 고등학교졸업 대비 대학졸업자의 임금격차는 1980년에 223%이던 것이 1995년에는 156%로 축소되었다.³²⁾ 학력간의 임금격차는 청장년층에서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노령화되면서 그것은 확대되고 있다 한다. 이러한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 우선 고학력 노동인력의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점, 교육투자의 수익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고학력자의 수요증가현상, 즉 기술진보가 비중립적이라는 원인을 들고 있다.³³⁾ 또 도시의 경우 노동인력이 고령화됨에 따라 소득격차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도 검증되었다 한다.³⁴⁾

2. 농가소득

농가계소득의 불평등은 도시에 비하여 그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것과 도시가계소득의 변동과 독립적으로 변동하고 있는 점, 그리고 농가계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수준이었으나 점차 해가 거듭됨에 따라 농업소득의 비중은 감소되어 1990년대는 50% 수준에서 40%대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업외소득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연도별로 변동은 있으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농업외소득의 비중은 20% 이하 수준이었으나 그것은 점차 확대되어 1990년대에는 30%대로 접근하다 1996년의 경우는 32%나 된다. 이와 같이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은 상호 보완적이기는 하나 농업소득은 상대적으로 감소해 가는 반면 농업외소득은 점차 증가해 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리고 1983년부터는 이전소득의 항목이 신설되는데 이 이전소득의 상대적 크기도 점차 커져가는 경향이다.

농가소득을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불평등의 수준과 변동

32) 한국노동연구원 [5], pp. 40~43.

33) 崔康植 [3].

34) 襄埃浩 [1].

〈표 1〉 농가계소득구성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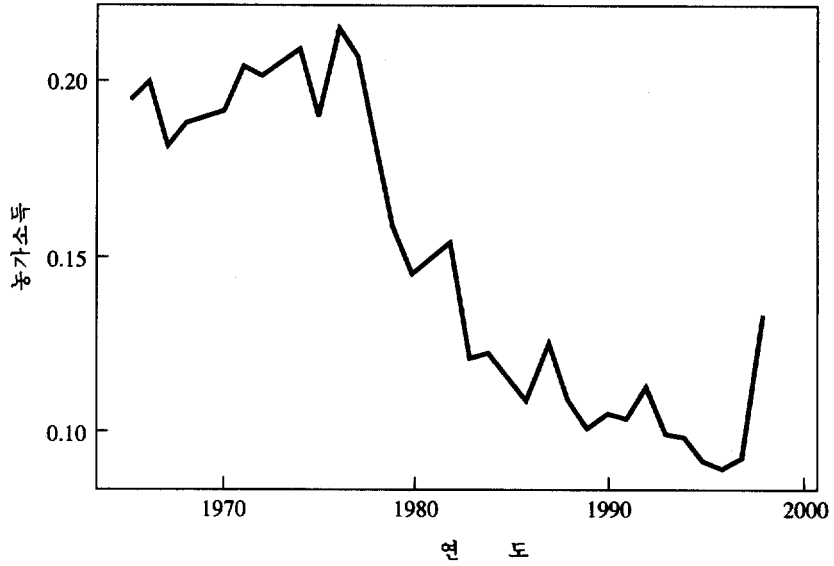
연 도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농가소득
1970	81.88	18.13	100.00
1975	81.07	18.93	100.00
1980	65.36	34.64	100.00
1985	64.05	35.95	100.00
1990	56.81	43.19	100.00
1995	52.11	47.89	100.00

자료 : 농수산부, 「농가조사보고서」, 해당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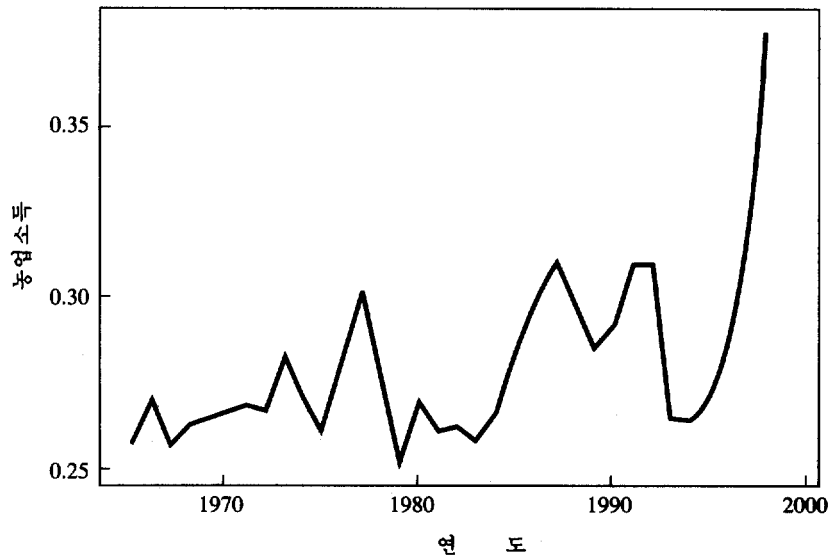
양상을 분석해 본 결과 도시가계의 불평등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농가의 주요소득원이 농업에서 점차 농업외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는 점과 또 농업의 경영규모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소유 상한제와 그리고 농경지의 자연조건 때문에 대규모의 농업경영의 제한으로 생기는 특수사정이 있다. 이러한 특수사정 때문에 농촌에서의 불평등은 두 가지의 특징이 엇보인다. 그 하나는 불평등의 수준이 낮은 점이다. 농가소득의 지니 계수는 1964년 이후 0.10에서 0.20 사이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변동하고 있다. 농업소득의 불평등은 그 기간에 지니 계수로 0.25에서 0.30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농가소득의 불평등보다 높은 수준이기는 하다. 그리고 농업외소득의 경우는 0.10에서 0.20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농업소득의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편이고 그 다음이 농가소득의 불평등도, 마지막으로 농업외소득의 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편이다.

각 소득의 불평등 변동은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농가소득의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인 데 반해 농업외소득의 경우는 점차 악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업소득의 불평등은 다소의 변동은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농가소득의 불평등은 점차 개선되어 가다 1983년부터 더욱 빨리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농업외소득의 불평등은 점차 악화되다가 1983년부터 더욱 급하게 악화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농업소득의 불평등도 1984년부터 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양상이다.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1983년은 농업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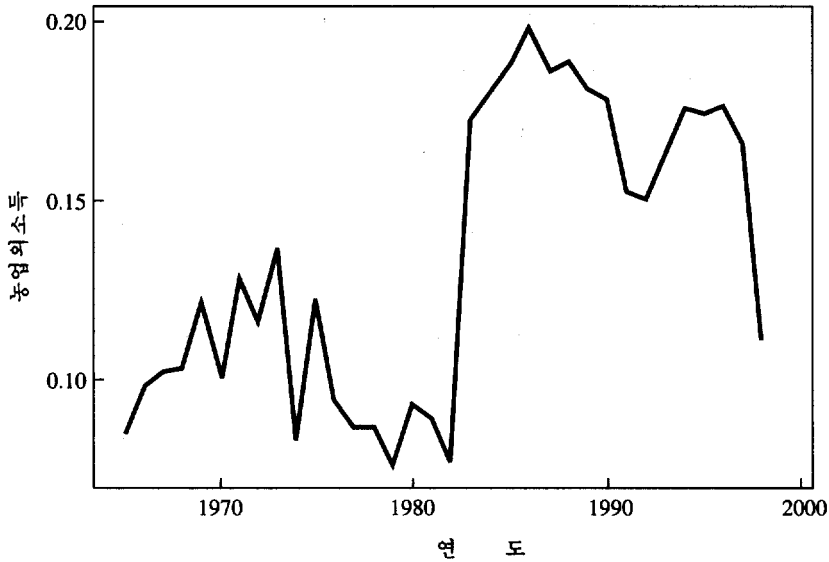
〈그림 3〉 농가소득불평등도 지니 계수(1965~1998)



〈그림 4〉 농업소득불평등도 지니 계수(1965~1998)



〈그림 5〉 농업외소득불평등도 지니 계수(1965~1998)



3. 가계소득의 문제점

가계조사에서 얻은 자료로 추정된 소득불평등도는 지니 계수로 1995년의 경우 도시가계는 0.32, 농촌가계는 0.08(농업소득은 0.27)로서 미국, 영국 그리고 OECD 각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분포 상태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거의 불변의 상태라 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절대빈곤인구도 1965년에 40%에서 1985년에는 10%로 해를 거듭함에 따라 더욱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1965년에서 1985년까지 일반가계의 소비수준도 연평균 5.6%씩 증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은 소득이나 부가 일부에 편중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문은 왜 제기되고 있는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연유된 것으로 짐작된다. 첫째는 도시가계조사에서 소득조사대상을 근로가계만으로 국한시켜 고용주와 단독가구가 조사모집단에서 제외되었고, 둘째는 농가계조사에서도 비농업가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킨 데 연유된 것 같다. 이 두 부문에서 제외된 가구는 약 40% 정도이다. 즉, 모집단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소득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정부정책의 대상이 도시의 근로소득자와 그리고 농촌의 농업경영자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일반의 외침에 답하기 위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전국규모로 4,000가구의 표본

〈표 2〉 부의 불평등(지니 계수)

자산종류	지니 계수
개인자산	0.58
실질자산	0.60
금융자산	0.77
소 득	0.40

자료 : KDI, 「소득과 부의 공정한배위원회 보고서」, 1989.

조사로 소득과 자산의 분포상태를 조사했고 또 정부는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토지 가운데 100만 필지를 조사·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개발원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소득인원의 40%가 15%의 소득을 분배받는 것으로 조사된 데 반하여 정부조사의 통계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20%의 소득을 분배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상위 20%의 사람들은 전체소득의 47%를 분배받는다고 조사된 데 반하여 정부의 조사에서는 44%밖에 안된다. 또 한국개발원의 조사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과를 비교해 본 결과 한국개발원의 조사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계정에서 25% 정도나 되는 부분이다. 또 고소득자가 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이 한국은행의 국민계정과 비교하면 75%만이 보고 반영되어 있었다 한다. 한국개발원에서 조사한 부의 불평등상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소득도 조사해서 분석하였다. 이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의 불평등을 10분위에 따라 보면 우선 상위 10% 사람이 소유한 부는 전체의 43%나 되며 상위 5%의 사람은 31% 그리고 상위 1%의 사람은 전체 부의 14%나 소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부는 토지자산과 금융자산의 합계를 뜻한다.

1988년 토지공개념위원회에서 전국의 토지 가운데 100만 필지를 조사·분석한 결과 당시의 평가액 최저 추정치는 2.6조 원(미불 달러화로 3천억불 달러)이라 한다. 위원회의 의견에 의하면 실제의 평가액은 위 추정치의 2배 내지는 3배 정도라 한다. 불평등상태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28% 사람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72%는 토지를 전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토지소유자 가운데 62% 사람이 서울의 34%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의 사람은 66%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소유의 불평등상태를 지니 계수로 표현해 보면 0.85나 된다.

한국에서 1974년부터 1989년 사이에 토지가격은 GNP증가의 3배나 등귀했고, 1989년의 경우 토지소유로부터 얻은 자본이득은 대체로 GNP를 초과했다 한다. 개인 부의 추정액은 700조 원 정도이고, 이 가운데 60%가 토지에서 생긴 것이라 한다. 이

〈표 3〉 민 유지의 계층별 토지소유상태(1988)

(단위 : %)

토지소유계층	전 국	서울
상위 5%	62.5	57.7
상위 10%	76.9	65.9
상위 25%	90.8	77.8
지니 계수	0.85	

자료 : 토지공개념위원회, 「토지공개념위원회 연구보고서」, 1989. 5.

와 같이 부와 소득이 집중된 상태임에도 저평가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심하게 집중된 상태에서 고소득자는 소득신고나 토지소유를 성실하게 등기하지 않고 분산·은폐시키는 예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³⁵⁾ 이와 같이 토지의 소유를 선호하는 원인은 토지가 많은 자본이득을 만들어 낼 뿐만이 아니라 물가불안에 따른 자산 가치보유의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지자원에 대하여 도우킨(R. Dworkin)은 자원의 평등을 주장한 데 대하여 로마(J. Roemer)는 자원을 이전할 수 있는 자원과 재능과 같이 이전할 수 없는 자원으로 구분하고, 개인간에 이전할 수 없는 자원으로부터 생기는 후생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인간 이전 가능한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서 개인간의 후생의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의 평등은 후생의 평등을 의미한다는 명제위에 “자원의 평등은 후생의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정리를 도출했다.³⁶⁾ 로마의 정리는 하나의 이상이기는 하나 우리의 경우도 토지소유의 집중을 제한하려고 많은 정책을 구사했지만 그 실효성이 애매하다는 것은 위와 같은 토지소유의 집중현상이 대변해 주고 있다.

VI. 결 론

이상의 내용은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공정분배의 기준이며, 둘째는 불평등의 변화에 관하여, 셋째는 불평등의 규범적 척도에 관하여 그리고 넷째는 한국의 불평등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 소득분배의 공정기준에 관해서 과거 200년 동안 공리주의가 지배해 왔다. 이 공리주의가 주장하는 최대 행복의 추구는 효용으로 표현되고 이 효용은 소득의 합수

35) Leipziger *et al.* [22].

36) Roemer [28], pp. 237~262.

로, 이 함수의 성질은 소득에 대하여 증가함수이나 그 증가는 체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이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사회도 최대 행복을 가치의 기준으로 한다. 사회의 최대 행복, 즉 사회의 효용의 최대화는 일정한 소득을 평등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학의 기본가치인 공리주의에 대하여 비판과 더불어 새로이 등장한 가치가 '정의론'이다.

우선 정의론은 가치의 추구가 최대 행복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분배의 공정 기준을 자유우선성과 격차원리라는 두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즉, 분배의 기준은 자유가 우선해야 하고 또 불우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을 부여하는 원칙, 이것이 바로 정의론이 주장하는 공정분배의 기준이다. 이러한 분배의 가치기준 변화에 따라 과거의 맹목적인 평등분배를 최근에는 노년층과 장애인 복지에도 주력하게 되었다.

둘째, 불평등의 변동에 관해서, 그 동안 불평등의 변동은 소득증가에 따른다는 소위 쿠즈넬츠의 역 U자형이론이 지배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영국과 미국 그리고 여러 OECD 각국의 소득불평등이 1970년경부터 급상승하는 양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서 쿠즈넬츠 이론과는 달리 두 가지 주요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하나는 소득불평등의 변화가 곡선이 아닌 토막(episodic)의 연결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불평등을 변동시키는 것이 소득이라기보다는 다른 몇 가지, 즉 무역의 자유화, 기술의 변화 그리고 조직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들의 인식은 쿠즈넬츠 이론의 진부화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불평등의 기술적 척도 대신 후생의 개선 지표로 이용될 수 있는 규범적 지표를 설명하고 그의 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넷째는 한국의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도시와 농촌 간에 불평등의 수준이나 변동 양상이 현저하게 다른 점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농업 이외의 소득비중이 커짐에 따라 불평등이 악화되는 반면 농업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불평등은 개선되는 경향이다. 또 불평등의 수준은 농업소득의 경우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농업외소득과 농가소득의 불평등의 변화를 비교하면 1980년대 초까지는 농가소득의 불평등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그 후부터는 농업외소득의 비중도 커지고 불평등도 역전하여 악화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도시가계조사 표본크기와 소득조사를 하는 근로가계의 표본크기 간에는 연도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불평등지표의 왜곡을 의미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불평등 지표는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표본 모집단을 확대한 KDI의 표본조사에 의한 소득불평등은 0.40으로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완·설명하는 것으로서 토지공개념위원회에서 조사·분석한 토지소유 집중현상은 심각한 상

태이다. 이상의 분석에 따라 다음 몇 가지를 재현하게 된다. 그 하나는 소득분배 상태를 알기 위한 표본조사는 현재와 같은 부분 모집단에서 조사한 표본으로 계측된 불평등 지표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표본의 개편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불평등도 그의 변동 양상만을 인식하는 데에서 벗어나 경제학적 그리고 경영학적 분석방법에 의해서 변동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셋째는 불평등도가 다만 분배상태의 인식에서 국민후생 향상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즉 정책적 지침이 되어야 함이 요청된다.

◆ 참고 문헌 ◆

1. 裴垓浩, “老齡社會의 所得隔差와 相續稅”, 『經濟學研究』, 45(3), 1997, pp. 47~76.
2. 尹起重, 『韓國經濟의 不平等 分析』, 博英社, 1997.
3. 崔康植, “學歷別 相對的 賃金隔差의 變化와 原因分析”, 『經濟學研究』, 45(4), 1997, pp. 193~226.
4. 崔炳瑞, “原初的 狀態에서의 分配 正義”, 『經濟理論과 韓國經濟-崔虎鎮 博士 講壇50週年 紀念論文集』, 博英社, 1993.
5. 한국노동연구원, 「KLI 勞動統計」, 1997.
6. Adelman, I. and C. T. Morris,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3.
7. _____,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975.
8. Aghion, P., Caroli, Eve, and Cecilia Garcia-Penalosa,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The Perspective of the New Growth Theori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XXXVII, 1999, pp. 1615~1660.
9. Atkinson, A. B.,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2, 1970, pp. 244~263.
10. _____, “Bringing Income Distribution in from The Cold,” *The Economic Journal*, 107, March, 1997, pp. 297~321.
11. Bentham, Jeremy, 1838~1848 *The Works of Jeremy Bentham*. II Vols. edited by John Bowring Edinburgh : William Tait. Reprinted in 1962 by Russell & Russell in a Limited edition.

12. Butler, Eamonn, *Hayek, His Contribution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Thought of Our Time*, 1983 (Hayek, 鹿島信吾·清水元譯, 筑摩書房).
13. Dalton, H.,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of Income," *Economic Journal*, 30, 1920, pp. 348~361.
14. Friedman, Milton, *Capitalism and Freedom*, 1982 (徐在明 역, 『資本主義와 自由』, 협동연구사, 1986).
15. Goodman, A. and S. Webb, *For Richer, for Poorer : The Changing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United Kingdom, 1961~1991*, Commentary No. 42, London :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1994.
16. Harsanyi, John, "The Dimens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Power," *Behavioral Science*, 7, 1962, pp. 67~80.
17. Hayek, F. A., "Liberalism,"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London : Routledge, 1978.
18. Hills, John, "Introduction : After the Turning Point," *New Inequalities*, J. Hills(ed.), *The Changing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in th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 1~16.
19. Jain, S., *Size Distribution of Income: A Compilation of Data*, Washington, D. C. : World Bank, 1975.
20. Kuznets, 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XLV(1), March, 1955, pp. 1~28.
21. _____,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 : Distribution of Income by Siz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pt. 2, 1963, pp. 1~80.
22. Leipziger, D. M., Dollar, D., Shorrocks, A. F. and Su-Yong Song,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in Korea*, World Bank, 1989.
23. Lewis, Arthur W.,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Manchester School*, 20, May, 1954, pp. 139~191.
24. Lydall, H. B., "Income Distribution during the Process of Development," *World Employment Programme Research Working Paper*, 52, International Labor Office, 1977.
25. Marx, K.,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Karl Marx and Fredrick Engels Selected Works*, I, 8th edit., New York : International Publishers, 1984, pp. 315~335.

26. Okun, A. M., *Equality and Efficiency*, Brookings Institution, 1975 (이영선 역, 『평등과 효율』, 현상과 인식, 1993).
27.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28. Roemer, J.,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29. Sen, Amartya, *On Economic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30. _____, "Rawls versus Bentham : An Axiomatic Examination of the Pure Distribution Problem," Daniels(ed.), *Reading Rawls*,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pp. 283~292.
31. _____, *Inequality : Reexamined*,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32. Thurow, Lester C., "Toward a Economic Justice," *Public Interest*, Spring 1973.
33. _____, *The Future of Capitalism*,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96.
34. Vickrey, William, "Utility, Strategy and Social Decision Rul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4, 1960, pp. 507~535.